

북한 핵미사일 위험과 경제적 파급효과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북한이 폭주하고 있다.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벌써 10여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다. 또한 9월 3일에는 제6차 핵실험까지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9월 15일, 북한은 중장거리미사일인 화성 12호를 3,700km 거리까지 날려 보냄으로써 괌 타격능력을 과시하였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핵능력 완성이 목전에 다가오는 듯하다. 이를 확인하듯 김정은은 “이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조선중앙통신』, 2017. 9. 6). 이러한 언급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북한은 핵능력이 완성될 때까지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의 핵 개발 지속은 필연적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한 위험(risk)’의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 회피(risk-averse) 성향을 가지는 경제주체가 보통 때와는 다른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북한 위험’이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첫 번째 위험은 전쟁발발 가능성의 확대이다. 이는 북한이 핵능력을 완비하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능력을 완비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미국의 대량보복을 각오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잘 아는 김정은은 핵능력이 완성된 후라고 해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핵무기를 ‘정치적 무기’라고 일컫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강압과 국지 도발은 증가할 수 있다. 핵무기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한국이 핵보유국인 북한에게 쉽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이것이

핵국가들 사이에 핵충돌은 없으나 국지적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능력을 갖춘 이후에 오히려 국지도 발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발발 위험은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 완성 이전에 존재한다. 북한의 ICBM 전력화를 막으려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할 경우 북한의 보복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그 결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미국정부는 현 단계에서 군사적 옵션이 후순위라고 말하고 있으나, 북한의 ICBM 능력 구비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군사적 옵션의 우선순위는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동맹결속 완화 또는 동맹방기(abandonment)의 위험이다. 미국은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지원해 왔다. 이는 양국 간의 확고한 약속이며 현재도 미국의 보장 및 재보장(assurance and reassurance) 약속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능력을 완비하면 이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가능성 때문이다. 탈동조화란 양국의 이해가 상호 충돌하여 공동의 정책이 와해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핵미사일로 워싱턴이나 LA를 타격하겠다고 북한이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본토에 대한 핵타격을 우선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철회를 고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탈동조화 우려는 과거 유럽에서 만연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유럽과 ‘핵 공유 협약(Nuclear Sharing Arrangement)’을 맺었다. 한편, 미국이 북한과 ICBM 폐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북한의 단거리핵미사일 보유를 허용하는 핵동결에 합의한다면 한미 양국 사이에는 ‘탈동조화’ 또는 ‘동맹방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 위험’이다. 만약 북한의 핵동결이 용인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은 독자 핵개발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제재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정’의 파기로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위험은 중국과의 대치 가능성 증대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갈등상태에 있다. 사드배치 때문이다. 그런데 사드배치의 원인을 살펴보면 이 또한 북한 핵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이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반발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 내 전술핵 배치 또는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시도될 경우이다. 중국은 한국의 핵 보유 및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반대한다. 한국 내에 배치된 핵무기가 중국을 겨냥할 수 있고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능력 완성과 그에 따른 일련의 반작용은 한국과 중국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그 성격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히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험 상승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상황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위험 상승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식가격이 떨어지고 국제여신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만 유효할 경우 주식가격과 국제금리는 바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시점을 주식매입 기회로 삼을지 모른다. 단기적 영향만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지속될 수는 없다. 북한의 핵능력 완성 시점이 다가오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 위험성이 상승하면 한국의 '국가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위험의 상승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한국에 대한 '여행경계령'이 내려진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도 하락은 격화될 것이다. 한편, 선제타격 직전에 미국인 '소개작전(Non-residents Evacuation Operation: NEO)'이 실시된다면 그 충격은 매우 직접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비 위축과 투자 저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면 기업들은 투자결정을 멈춘 채 사태를 관망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도 감소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도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며 현금자산 대 실물자산의 보유비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 이는 금리 변화와 일부 실물자산의 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한국이 독자 핵개발을 결정할 경우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해외원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당분간 전력발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로 매우 큰 고통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고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는 일인가? 현 상황에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이 ICBM 완성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및 극적인 해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한반도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실제 대북 선제타격이 계획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기가 한껏 고조된 후에 극적인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동북아의 어떤 국가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일관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능력 확보 이후에 북한과 별일 협상에도 미리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의 미래 안보환경 및 위협도가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 국면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유지이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개발 등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한편,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될 수조차 없다. 전술핵은 미군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위협은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ICBM 전력화를 막으려고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군사적 옵션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 완비시점이 다가올수록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우리는 대미 설득을 통해 이의 실행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한반도에서 다시금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타격 옵션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할지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이 합의한 선제타격 불사용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의 채택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유지는 김정은이 핵개발과 도발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북핵 위협의 고조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북핵 위협이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만에 하나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구걸할 수는 없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임벌린 내각의 실패가 좋은 교훈을 제공한다. 국민적 합의 및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